

#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2018. 12

최수영·손태홍

■ 연구 배경과 목적 .....	4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 .....	6
■ 건설현장 실태조사 방법과 분석 체계 .....	8
■ 건설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0
■ 정책 제언 .....	30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원칙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Low Impact 현장과 High Impact 현장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음.

  - Low Impact(공기 적정) 현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기 관리를 통한 공사 기간 준수가 가능한 경우
  - High Impact(공기 부족) 현장 : 탄력근로제 적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가 적정했던 현장이 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 109개 건설사업(토목 77개, 건축 32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8개 사업(44.0%)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조사됨.

  -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 사업(43.8%)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이 예상됨. 특히, 지하철(11개 사업 중 9개)과 철도(14개 중 사업 11개) 사업은 영향이 큰 사업으로 분석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 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단축되었음. 61개 공기 적정 사업은 평균 57.9시간에서 55.8시간으로, 48개 공기 부족 사업은 평균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돼 공기 부족 사업의 기존 현장 운영 시간이 길고 운영 시간의 단축 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음.
  -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한다는 점임.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민간 건축사업인 아파트는 7개 사업 중 6개, 오피스텔은 3개 사업 모두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분석됨.
  -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탄력근로제의 적용 및 단위 기간 확대임. 하지만 노동자 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 부족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공사 기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 계약된 공공공사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된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이나 돌관작업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지침 마련 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기 계약된 민간공사 : 2018년 7월 1일 이전 계약된 민간 계속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주자, 시공자,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신규공사 : 공공과 민간 공사를 막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이 필요함.
  - 탄력근로제 확대 : 기상 요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토록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야 함.

## I 연구 배경과 목적

■ 지난 7월 1일부터 주(週)당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음(이하 주 52시간 근무제).

-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1일 8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장 근로 시간을 주중과 주말 포함하여 12시간으로 제한해 기존 최대 가능 법정근로시간(68시간)을 16시간 (23%) 단축하는 것임.
-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름.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단축된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감안하여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

■ 최은정·최수영(2018)<sup>1)</sup>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공사비 증가 : 기 수주된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노무비 증가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계약 변경이 쉽지 않음. 즉,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가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하기 힘들.
- 공사 기간 증가 : 옥외 사업의 특성상 계절적·기상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편차가 큼. 이로 인해 지연된 작업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집중 근무를 통한 공사 기간 만회가 힘들.
- 비효율적인 현장 관리 : 건설현장은 다양한 규모의 여러 사업체가 협업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 현장 내 사업체들의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현장 운영의 혼란 및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 근로시간 단축이 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항목 등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함.

- 주요 내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계약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5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해 계약 당사자가 발주기관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 기간 연장을

1) 최은정·최수영(2018),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요구하면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사업의 특성상 계약 기간 조정이 용의치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방에게 휴일 혹은 야간작업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와 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되는 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함.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의 기본 원칙을 마련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장된 사업 기간의 산정 기준이나 돌관작업에 따른 비용의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함.
- 공공공사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원칙만을 마련하였을 뿐 국내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사업에 대한 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지난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일부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 등의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함.

-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은 불가피하나 시공자와 발주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여 건설사와 조합원 간의 마찰이 발생함(하우징헤럴드, 2018.8.23).
- 000의료원 사업은 올 11월 공사 완료 후 내년 4월 개원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올 여름의 계속된 폭염과 우천 등 계절적 요인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주자와 시공사는 약 3개월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함(기호일보, 2018.9.3).
- 000청사 신축 공사는 2019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완공 예정일이 한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발주자의 업무 차질이 우려됨(법률신문 뉴스, 2018.9.16).
- 2019년 6월 준공 예정인 000여객터미널 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야간 및 주말 작업이 힘들어져 완공 시기가 약 5개월 늦어진 2019년 11월로 연기됨(서울경제, 2018.10.10).

❖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건설기업이 수행 중인 실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Ⅱ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정

### 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협의 과정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은 2010년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되기 시작함.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의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합의(2010년 6월 8일)를 시작으로 구체화됨.
  - 이후 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합의문(2012년 1월 31일)과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2013년 7월 17일) 등을 통해 기본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노사정위원회는 ① 근로시간 단축, ② 해고 기준 완화, ③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함(2016년 9월 15일).
  - 당시 여당은 위 합의문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김무성 의원, 2015년 9월 16일)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됨.
  - 20대 국회에서 다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이 3건<sup>2)</sup> 발의되었고,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 2018년 3월 20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최대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 건설업계는 기 계약된 공사의 적용 배제, 현장별 근로시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됨.

### 2.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보완 대책

-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 4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6월 27일 행정안전부에 시달함.
  -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2018년 8월 9일)하고 단축된 근로시간 등을 반영한 표준 공기 산정에 대한 연

2) 김성태 의원안(2016.5.30), 한정애 의원안(2016.7.13), 홍영표 의원안(2016.7.27).

구 용역을 진행 중임.

- 정부는 2018년 6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적응을 위하여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2018년 10월 23일)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발의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주요 개정안은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관한 내용과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됨.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발의안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표 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발의된 국회 주요 개정안

발의자	주요 내용	개정 내용	발의 시기
신보라 의원 추경호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 합의 1년	2018년 4월
송희경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 (개정) 취업규칙 6개월, 노사 합의 1년	2018년 8월
박대출 의원	특별연장근로 사유 변경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개정) 사업·업종 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018년 8월
송언석 의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기업 확대	(현행) 30인 미만 (개정) 300인 미만	2018년 9월
정갑윤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개정) 주 52시간 초과 금지 규정 삭제	2018년 9월
장병완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 합의 6개월	2018년 10월
	특별연장근로(고용부 인가) 사유 추가	(개정) 업종의 특성상 연장근로 불가피한 경우	
이은권 의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현행) 취업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 (개정) 취업규칙 1개월, 노사 합의 1년	2018년 11월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 제외	(개정) 건설업 해외파견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기 계약된 공사 적용 제외	(개정) 7월 1일 이전 공사의 종전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종 확대	(개정) 특례 업종에 건설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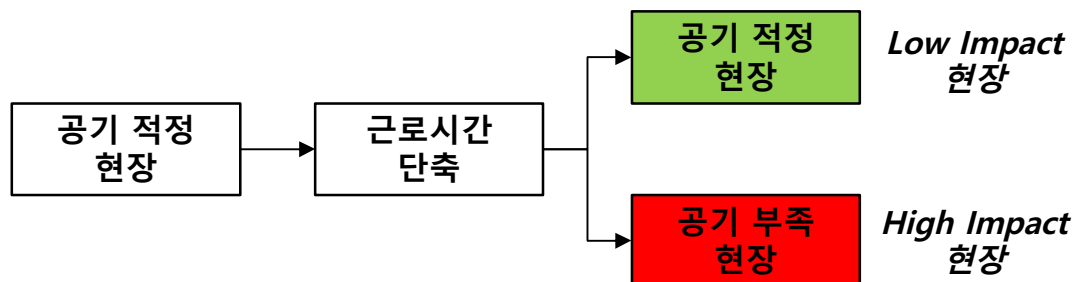
### Ⅲ 건설현장 실태조사 방법과 분석 체계

-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청하였음.
  -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6개로 대형 건설기업이며, 민간사업을 비롯해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임.
  - 해외 현장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해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되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는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건설사업의 정보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음.
  - 사업의 기본 정보 :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공사 구분, 세부 공사의 내용을 의미하는 공사 유형, 발주자 유형(민간, 공공), 공사 기간과 공사 규모, 그리고 2018년 7월 1일 기준 공정률 등
  - 현장 운영 정보 등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영향을 주는 이유 :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현장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월 단위로 현장을 운영하지 않는 일수(shut-down), 탄력근로제의 시행 여부 등
  - 공기 연장과 추가 공기 정보 등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연장 가능성 여부, 추가로 소요되는 공기의 규모, 기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사항 등
- 근로시간 단축은 건설업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사업 현장 단위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음.
  - 토목과 건축 사업으로 구분해 추가 필요 공기와 공사 기간, 공사 규모, 공정률, 잔여 공사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
  - 상관관계 분석이 두 요인 간의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경향의 강도를 해석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을 사업의 특성별로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Low Impact 현장과 High Impact 현장을 구분하여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Low Impact(공기 적정) 현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관리의 애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기 관리를 통한 공사 기간 준수가 가능한 경우
- High Impact(공기 부족) 현장 : 탄력근로제 적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기가 적정했던 현장이 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림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Low Impact와 High Impact 현장의 구분



## IV 건설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 실태조사 대상 사업의 개요

■ 총 6개 건설기업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을 전수 조사한 3개 기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현재 수행 중인 전체 건설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진 기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실태조사에 포함된 건설사업은 총 141개이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109개 사업을 토대로 분석함.

- 분석에서 제외된 사업 32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계약되어 근로시간 단축 전후 비교가 불가능한 사업, 2019년 1월 1일 전 준공 사업,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계한 사업의 세부 항목(공사 기간, 공사비, 공정률 등)이 조사되지 않은 사업들임.

■ 109개 건설사업은 77개 토목사업과 32개 건축사업으로 구분됨.

- 토목사업은 3개 건설기업, 건축사업의 경우 1개 건설기업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토목사업은 Horizontal Construction을 대표하며, 건축사업은 Vertical Construction 위주의 작업이 이루어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대부분 건설기업은 토목과 건축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함.

### 2. 건설사업 분석 결과

■ 실태조사 분석에 포함된 109개 건설사업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평균 공사 규모는 2,089억 3,000만원, 공사 기간은 약 64.4개월이며, 평균 공정률은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47.7%(잔여 공사 기간 28.5개월)임.
- 발주자 유형별로는 공공사업이 63개(5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간사업 32개(29.4%), 민자사업 13개(11.9%), 공공/민간사업 1개로 조사됨.
- 공기 연장 가능 여부는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54개(49.5%),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44개(40.4%), 미정인 사업이 11개(10.1%)로 파악됨.

- 탄력근로제 적용의 경우 주 52시간 시행 전 82개 사업(75.2%)이 적용하지 않았으며, 시행 후에는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이 77개 사업으로 70.6%를 차지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현장 운영 실태(시종업 시간과 월 휴무 횟수) 조사 결과, 7to6<sup>3)</sup>(월 0회 휴업)가 47개(43.1%), 7to6(월 2회 휴업)가 31개(28.4%), 7to6(월 4회 휴업)가 11개(10.1%)로 조사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현장 운영 실태(시종업과 월 휴무) 조사 결과, 7to6(월 0회 휴업)가 31개(28.4%)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7to5(월 2회 휴업) 16개(14.7%), 7to6(월 4회 휴업) 15개(13.8%) 순으로 조사됨.

■ 109개 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48개로 전체의 44.0%를 차지함.

- 공사 기간의 경우 공기 적정 사업이 평균 70.2개월로 57.4개월의 공기 부족 사업에 비해 긴 것으로 분석됨. 이는 계약 공사 기간이 짧은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된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44.8%로 공기 적정 사업(50.1%)에 비해 낮았으며 잔여 공사 기간도 평균 31.1개월로 공기 적정 사업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공정률이 낮고 잔여 공사 기간이 많이 남은 사업일수록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함.

〈표 2〉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건설사업의 영향 유무 및 주요 특성

구분	개소	평균 공사 규모	평균 공사 기간	평균 공정률	잔여 공사 기간
공기 적정 사업	61	2,075.5억원	70.2개월	50.1%	26.3개월
공기 부족 사업	48	2,106.2억원	57.4개월	44.8%	31.1개월

■ 발주자 유형별로는 민자사업 13개 중 8개 사업이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8개 공기 부족 사업 중 22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분석됨.

- 발주자 유형별 분석 결과, 공공사업 63개 중 26개 사업, 민자사업 13개 중 8개 사업, 민간사업 32개 중 13개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조사됨.
-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공기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48개 공기 부족 사업 중 22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됨.

3) 건설현장의 운영 시작 시간이 오전 7시이며 종료 시간이 오후 6시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및 오후 휴게시간을 각각 30분으로 가정함.

〈표 3〉 공기 부족 건설사업의 발주자 유형 및 공기 연장 가능성

(단위 : 개소)

구분	발주자 유형			공기 연장 가능성		
	공공	민자	민간	높음	낮음	미정
공기 적정 사업	37	5	19	18	36	7
공기 부족 사업	26	8	13	26	18	4
계	63	13	32	44	54	11

■ 탄력근로제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미적용 사업이 82개(7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시행 후에는 81개 사업(74.3%)이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sup>4)</sup>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68시간 근무제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기에 탄력근로제 미적용 사업 현장의 비중이 높았음.
- 하지만 2018년 7월 1일 이후 109개 사업 중 81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대부분 2주 단위)하고 있으며, 공기 부족 사업의 경우 48개 중 37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분석됨.

〈표 4〉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건설사업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미적용	2주	4주	미적용	2주	4주
공기 적정 사업	42	19	0	17(-25)	42(+23)	2(+2)
공기 부족 사업	40	7	1	11(-29)	35(+28)	2(+1)
계	82	26	1	28(-54)	77(+51)	4(+3)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건설현장 운영(시종업과 월 휴업 일수) 변경 실태를 살펴보면, 동일 운영사업이 63개, 단축 운영사업이 40개로 분석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건설현장 운영 실태 분석 결과, 109개 현장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7.9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62.6시간으로 조사됨. 7to6(월 0회 휴업)와 7to6(월 2회 휴업)이 각각 47개, 31개로서 조사된 건설사업의 71.6%를 차지함.

4) 2018년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에서는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시행한다는 현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임. 이는 선행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는 현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본사와 현장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즉, 본사에서 현장에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차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109개 건설사업 중 7개(10.1%) 현장만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었음. 즉,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주 52시간 기준이 아닌 약 주 60시간 기준으로 현장 운영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건설현장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109개 현장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57.3시간(-2.7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5.8시간(-2.1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59.1시간(-3.5시간)으로 단축되었음. 여전히 7to6(월 0회 휴업)가 31개소(2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현장 운영 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순환 근무 등을 활용하여 여전히 주 52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는 건설현장이 74개소(6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 기간 준수가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건설사업 현장 운영 실태 비교

(단위 : 시간, 개소)

구 분	주당 운영 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7to5(월 0회 휴업)	56	1	2	3	3(+2)	10(+8)	13(+10)
7to5(월 2회 휴업)	52	2	0	2	9(+7)	7(+7)	16(+14)
7to5(월 4회 휴업)	48	1	0	1	5(+4)	2(+2)	7(+6)
7to6(월 0회 휴업)	63	21	26	47	17(-4)	14(-12)	31(-16)
7to6(월 2회 휴업)	58.5	19	12	31	9(-10)	4(-8)	13(-18)
7to6(월 4회 휴업)	54	7	4	11	9(+2)	6(+2)	15(+4)
7to6(월 6회 휴업)	49.5	5	1	6	4(-1)	1(-)	5(-1)
기타		5	3	8	5(-)	4(+1)	9(+1)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		57.9	62.6	60.0	55.8	59.1	57.3

주 : 녹색으로 표시된 현장은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그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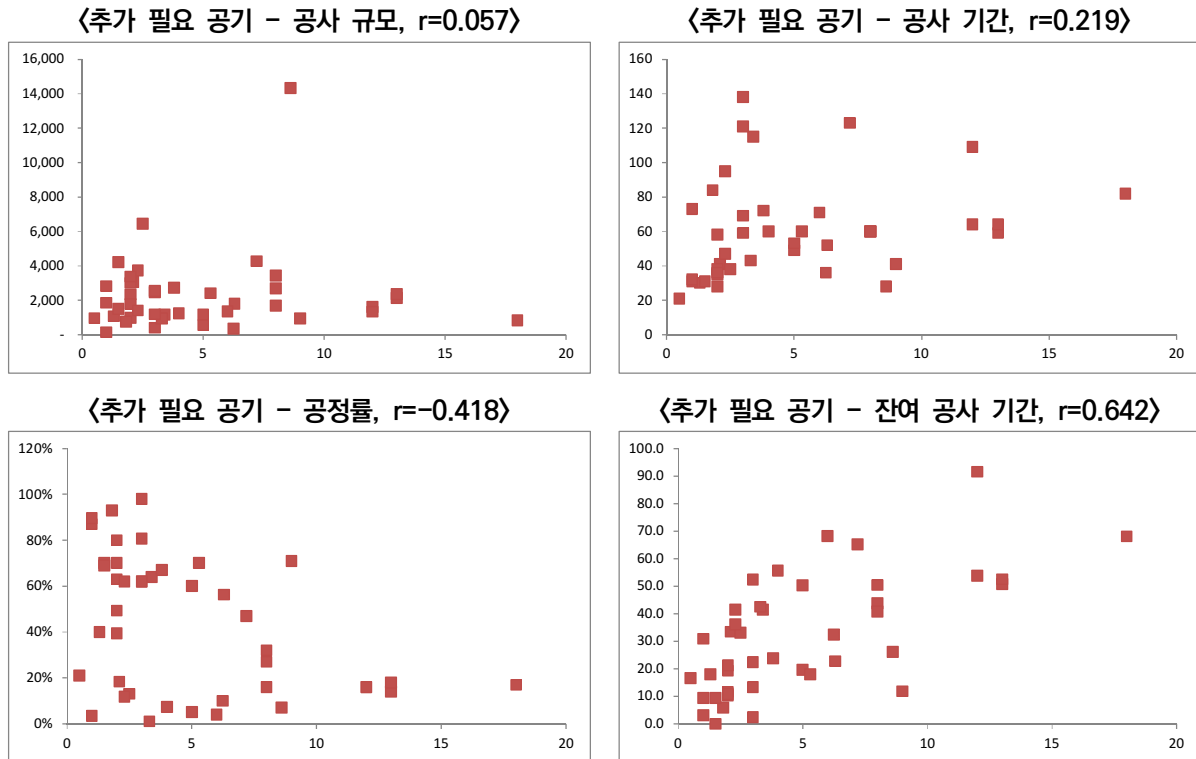
■ 공기 부족 사업 48개 가운데 8개 사업<sup>5)</sup>을 제외한 41개 사업의 평균 추가 필요 공기는 약 4.9개월로 조사됨.

- 41개 공기 부족 사업 중 추가 필요 공기 최댓값은 18.0개월, 최솟값은 0.5개월로 조사되어 사업별 추가 필요 공기의 차이가 큼.
- 추가 필요 공기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공정률, 잔여 공사 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추가 필요 공기는 잔여 공사 기간과 상대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상관계수  $r : 0.642$ )가 있음.

5) 8개 건설사업의 경우, “추가 필요 공기를 추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2〉 공기 부족 건설사업의 추가 필요 공기와 사업 특성 간 관계 분석 결과<sup>6)</sup>

(단위 : 개월, 억원)



■ 실태조사에 참여한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 즉 44.0%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사 기간 부족이 예상됨.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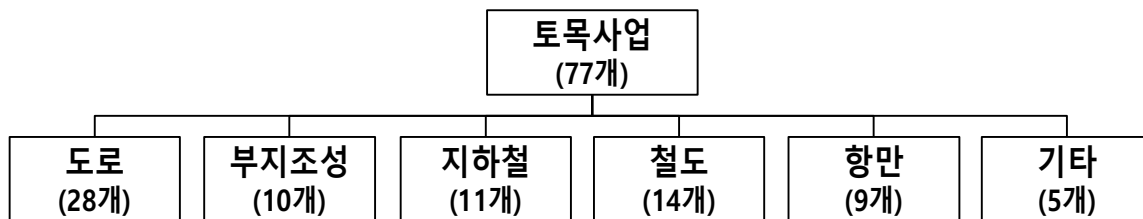
-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전에는 건설사업 109개 중 12개 사업(10.1%)만이 주 52시간 이하로 현장이 운영되었음. 이는 약 90%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주 52시간 시행 후 공기에 영향이 큰 사업과 적은 사업을 비교한 결과, 공기 부족 사업과 공기 적정 사업의 평균 공사 규모는 유사하나 공기 부족 사업(57.4개월)의 평균 공사 기간이 공기 적정 사업(70.2개월)에 비해 짧은 것으로 분석됨. 즉, 계약 당시 상대적으로 적정 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되는 48개 현장 중 37개(77.1%) 현장이 현재 탄력근로제 2주(35개 현장) 혹은 4주(2개 현장)를 시행하고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평균 추가 필요 공기는 4.9개월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추가 필요 공기는 잔여 공사 기간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관계된 것으로 분석됨.

6)  $r < 0.3$  적은 관계,  $0.3 < r < 0.7$  보통 관계,  $0.7 < r < 1.0$  큰 관계.

### 3. 토목사업 분석 결과

- 실태조사 분석에 포함된 토목사업은 77개임. 세부적으로는 도로 28개, 부지조성 10개, 지하철 11개, 철도 14개, 항만 9개, 기타 5개 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3〉 토목사업의 구분



- 세부 항목이 조사된 77개 토목사업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6〉과 같음.

- 토목사업의 평균 공사 규모는 1,349억 2,000만원, 공사 기간은 약 76.3개월이며, 평균 공정률은 53.1%, 평균 잔여 공사 기간은 30.4개월임.
- 평균 공사 규모는 철도사업이 1,832억 3,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평균 공사 기간은 도로사업이 97.3개월로 가장 길었음.

〈표 6〉 토목사업 유형별 주요 특성 요약

구분	개소	평균 공사 규모 (억원)	평균 공사 기간 (개월)	평균 공정률 (%)	잔여 공사 기간 (개월)
토목사업	77	1,349.2	76.3	53.1	30.4
도로	28	1,342.2	97.3	52.2	41.1
부지조성	10	1,139.5	85.9	53.8	19.3
지하철	11	1,228.6	60.3	39.3	36.6
철도	14	1,832.3	60.0	58.9	21.3
항만	9	902.1	54.7	55.8	22.5
기타	5	1,525.4	59.6	66.6	19.5

- 발주자 유형별로는 공공사업이 60개(7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자사업 13개(16.9%), 민간사업 4개(5.2%)로 조사됨.
- 공기 연장 가능 여부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37개(48.1%),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31개(40.3%), 미정인 사업이 9개(11.7%)로 파악됨.

〈표 7〉 토목사업 유형별 발주자 유형 및 공기 연장 가능성

(단위 : 개소)

구분	발주자 유형			공기 연장 가능성		
	공공	민자	민간	높음	낮음	미정
토목사업	60	13	4	37	31	9
도로	24	3	1	16	8	4
부지조성	6	1	3	5	5	0
지하철	8	3	0	4	4	3
철도	11	3	0	9	5	0
항만	8	1	0	1	7	1
기타	3	2	0	2	2	1

- 탄력근로제 적용의 경우 주 52시간 시행 전 51개 사업(66.2%)이 적용하지 않았으며, 시행 후에는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이 53개 사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함.

〈표 8〉 토목사업 유형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탄력근로제의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미적용	2주	4주	미적용	2주	4주
토목사업	51	25	1	20(-31)	53(+28)	4(+3)
도로	17	11	0	7(-10)	20(+9)	1(+1)
부지조성	7	3	0	3(-4)	7(+4)	0(-)
지하철	8	3	0	6(-2)	5(+2)	0(-)
철도	10	3	1	3(-7)	9(+6)	2(+1)
항만	5	4	0	1(-4)	7(+3)	1(+1)
기타	4	1	0	0(-4)	5(+4)	0(-)

- 주 52시간 시행 전의 현장 운영 실태(시종업과 월 휴무)를 조사한 결과, 7to6(월 0회 휴업)가 36개(46.8%)로 가장 높았으며, 7to6(월 2회 휴업) 21개(27.3%), 7to6(월 6회 휴업) 5개(6.5%) 순으로 확인됨(〈표 14〉 참조).
- 주 52시간 시행 후 현장 운영 실태 조사 결과, 7to6(월 0회 휴업)가 25개(32.5%)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7to5(월 2회 휴업) 14개(18.2%), 7to5(월 0회 휴업) 9개(11.7%) 순으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임.



■ 77개 토목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34개로 전체의 44.2%를 차지함.

- 주 52시간 시행 후 공기 부족 사업은 공기 적정 사업에 비해 공사 규모는 크나 공사 기간이 짧은 사업임을 알 수 있음. 또한, 공기 부족 사업은 공기 적정 사업에 비해 공정률이 낮고 잔여 공사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특성을 보임.
- 지하철사업의 경우 조사된 11개 사업 가운데 9개 사업(81.8%)이, 철도사업은 14개 사업 중 11개 사업(78.6%)이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큰 사업인 것으로 분석됨.
- 조사된 토목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사업은 28개 사업 중 9개 사업(32.1%)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기 관리에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항만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공기 문제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표 9〉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토목사업의 영향 유무 및 주요 특성

구분	개소		공사 규모(억원)		공사 기간(개월)		공정률(%)		잔여 공사 기간(개월)	
	적정	부족	적정	부족	적정	부족	적정	부족	적정	부족
토목사업	43	34	1,227.5	1,503.1	83.3	67.5	57.3	47.9	26.7	35.1
도로	19	9	1,116.7	1,818.2	94.6	103.1	55.8	44.6	33.5	57.1
부지조성	8	2	1,305.6	475.0	97.0	41.5	56.8	42.0	18.9	20.6
지하철	2	9	1,200.5	1,234.9	82.5	55.3	60.9	34.5	23.4	39.6
철도	3	11	2,209.0	1,922.9	78.7	57.6	74.3	53.6	18.2	23.2
항만	9	0	902.1	-	54.7	-	55.8	-	22.5	-
기타	2	3	1,986.5	1,218.0	58.0	60.7	50.0	77.7	29.2	13.1

■ 발주자 유형별로는 민자사업 13개 가운데 8개 사업이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4개 공기 부족 사업 중 11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분석됨.

- 발주자 유형별 분석 결과, 공공사업 60개 중 25개 사업, 민자사업 13개 중 8개 사업, 그리고 민간사업 4개 중 1개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공기 부족이 예상됨.
-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공기 연장 가능성 여부 조사 결과, 34개 공기 부족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고 3개 사업은 미정인 것으로 조사됨.

〈표 10〉 공기 부족 토목사업 유형별 발주자 유형

(단위 : 개소)

구분	공공사업		민자사업		민간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토목사업	35	25	5	8	3	1
도로	16	8	2	1	1	0
부지조성	5	1	1	0	2	1
지하철	2	6	0	3	0	0
철도	2	9	1	2	0	0
항만	8	0	1	0	0	0
기타	2	1	0	2	0	0

〈표 11〉 공기 부족 토목사업 유형별 공기 연장 가능성

(단위 : 개소)

구분	높음		낮음		미정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토목사업	14	23	23	8	6	3
도로	7	9	8	0	4	0
부지조성	3	2	5	0	0	0
지하철	1	3	1	3	0	3
철도	2	7	1	4	0	0
항만	1	0	7	0	1	0
기타	1	1	1	1	1	0

■ 〈표 12〉,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탄력근로제 시행 여부 분석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미적용 사업이 51개(66.2%)로 가장 많았으나, 시행 후에는 57개 사업(74.0%)이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68시간 근무제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기에 탄력근로제 미적용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하지만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77개 토목사업 가운데 57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대부분 2주 단위)하고 있으며, 공기 부족 사업의 경우 34개 가운데 23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인 것으로 분석됨.

〈표 1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토목사업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미적용		2주		4주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토목사업	25	26	18	7	0	1
도로	11	6	8	3	0	0
부지조성	5	2	3	0	0	0
지하철	0	8	2	1	0	0
철도	2	8	1	2	0	1
항만	5	0	4	0	0	0
기타	2	2	0	1	0	0

〈표 1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토목사업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미적용		2주		4주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토목사업	9(-16)	11(-15)	32(+14)	21(+14)	2(+2)	2(+1)
도로	4(-7)	3(-3)	14(+6)	6(+3)	1(+1)	0(-)
부지조성	2(-3)	1(-1)	6(+3)	1(+1)	0(-)	0(-)
지하철	0(-)	6(-2)	2(-)	3(+2)	0(-)	0(-)
철도	2(-)	1(-7)	1(-)	8(+6)	0(-)	2(+1)
항만	1(-4)	0(-)	7(+3)	0(-)	1(+1)	0(-)
기타	0(-2)	0(-2)	2(+2)	3(+2)	0(-)	0(-)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건설현장 운영(시종업과 월 휴업 일수)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된 77개 토목사업 중 동일 운영사업이 43개, 단축 운영사업이 31개로 분석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건설현장 운영 실태 분석 결과, 77개 현장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6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8.2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63.6시간으로 조사됨. 7to6(월 0회 휴업)와 7to6(월 2회 휴업)가 각각 36개, 21개로 전체의 74.0%를 차지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77개 현장 평균 주당 현장의 운영 시간은 57.6시간(-3.0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6.0시간(-2.2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59.7시간(-3.9시간)으로 단축됨. 비중은 감소했지만 7to6(월 0회 휴업)가 여전히 25개소(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로 주 현장 운영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토목현장은 77개 현장 중 각각 10개, 29개로 분석됨. 34개 공기 부족 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1개 사업만이 52시간 이하로 운영되었으나, 시행 후 11개 사업이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됨으로써 공사 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14〉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토목사업 현장 운영 실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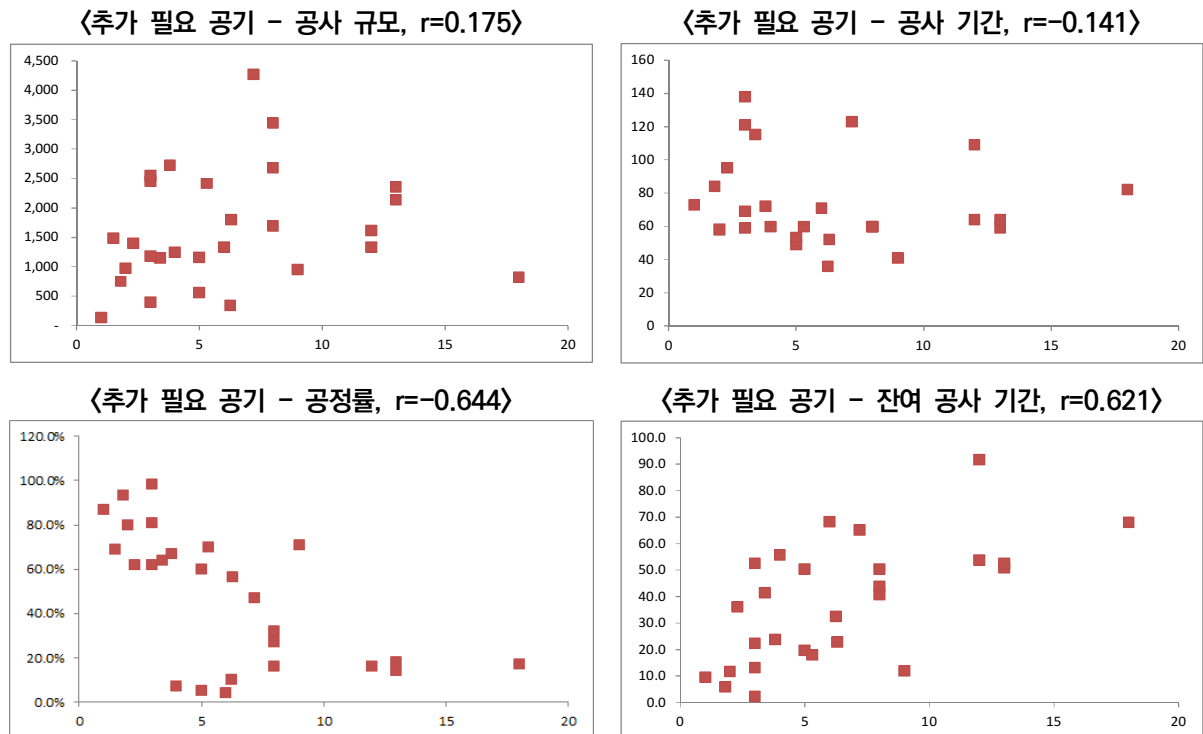
(단위 : 시간, 개소)

구 분	주당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7to5(월 0회 휴업)	56	1	1	2	3(+2)	6(+5)	9(+7)
7to5(월 2회 휴업)	52	2	0	2	8(+6)	6(+6)	14(+12)
7to5(월 4회 휴업)	48	0	0	0	3(+3)	2(+2)	5(+5)
7to6(월 0회 휴업)	63	18	18	36	15(-3)	10(-8)	25(-11)
7to6(월 2회 휴업)	58.5	12	9	21	3(-9)	2(-7)	5(-16)
7to6(월 4회 휴업)	54	2	2	4	3(+1)	3(+1)	6(+2)
7to6(월6 회 휴업)	49.5	4	1	5	3(-1)	1(-)	4(-1)
기타		4	3	7	5(+1)	4(+1)	9(+2)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		58.2	63.6	60.6	56.0	59.7	57.6

주 : 녹색으로 표시된 현장은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그룹임.

〈그림 4〉 공기 부족 토목사업의 추가 필요 공기와 사업 특성 간 관계 분석 결과

(단위 : 개월, 억원)



❖ 공기 부족 사업 34개 가운데 7개 사업<sup>7)</sup>을 제외한 27개 토목사업의 평균 추가 필요 공기는 약 6.2개월로 조사됨(〈그림 4〉 참조).

- 추가 필요 공기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공정률, 잔여 공사 기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추가 필요 공기는 공정률(상관계수  $r=-0.644$ ), 그리고 잔여 공사 기간( $r=0.621$ )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실태조사에 참여한 77개 토목사업 중에서 34개 사업(44.2%)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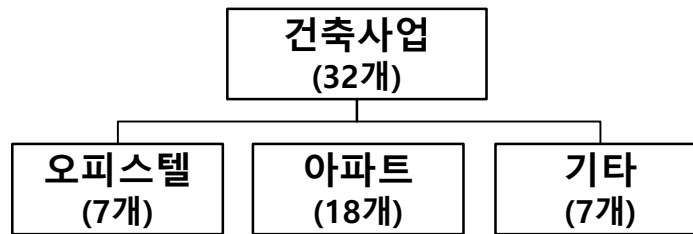
- 주 52시간 시행 후 공기 부족 사업은 공기 적정 사업에 비해 공사 규모는 크나 공사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음.
- 지하철사업의 경우 조사된 11개 사업 가운데 9개 사업(81.8%)이, 철도사업은 14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78.6%)이 공기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큰 사업임을 알 수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전에 조사된 토목사업 77개 가운데 10개 사업만이 주 52시간 이하로 현장이 운영되었음. 즉, 대다수의 토목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현장 운영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에도 48개 토목현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현장을 운영 중임. 현장 운영 시간을 단축한 사업도 31개소 있으나, 기 계약된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업이 43개소로 분석됨.
- 계속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면서 계약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함에 있어 현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조사된 60개의 공공 토목사업 중 25개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됨. 이 중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현장은 6개소, 미정인 현장이 1개소로 추후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공기 연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민자 토목사업의 경우 13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4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분석됨.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목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평균 공사 기간은 약 6.2개월로 분석되었음.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토목사업의 추가 필요 공기는 공정률과 잔여 공사 기간과 관련성이 높음.

7) 7개 사업의 경우, “추가 필요 공기를 추정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함.

## 4. 건축사업 분석 결과

- 세부 항목 조사에 포함된 32개 건축사업은 오피스텔 7개(주상복합 포함), 아파트 18개, 기타 7개 사업<sup>8)</sup>으로 구분됨.

〈그림 5〉 건축사업의 구분



- 32개 건축사업의 공사 규모와 공사 기간, 공정률 등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15〉와 같음.

- 평균 공사 규모는 3,870억 2,000만원, 공사 기간은 약 35.8개월이며, 공정률은 35.9%, 잔여 공사 기간은 23.5개월임.<sup>9)</sup> 조사된 건축사업 중 평균 공사 규모는 아파트가 5,457억 6,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공사 기간은 오피스텔이 평균 42.1개월로 가장 길.

〈표 15〉 건축사업 유형별 주요 특성 요약

구분	개소	평균 공사 규모 (억원)	평균 공사 기간 (개월)	평균 공정률 (%)	잔여 공사 기간 (개월)
건축사업	32	3,870.2	35.8	35.9	23.5
오피스텔	7	2,562.1	42.1	20.5	33.6
아파트	18	5,457.6	35.3	41.1	21.0
기타	7	1,096.3	31.0	38.1	19.6

- 발주자 유형별로는 민간사업이 28개(8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경우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사업으로 분류됨.
- 조사 당시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23개(71.9%),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7개로 확인됨. 오피스텔과 아파트 사업의 경우 공기 연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전체 25개 중에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8) 기타 건축사업은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을 포함함.

9) 32개 건축사업 가운데 기타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1개 사업은 공정률을 응답하지 않아, 공정률과 잔여 공사 기간은 나머지 31개 사업의 평균값을 의미함.

〈표 16〉 건축사업 유형별 발주자 유형 및 공기 연장 가능성

(단위 : 개소)

구분	발주자 유형			공기 연장 가능성		
	공공	공공/민간	민간	높음	낮음	미정
건축사업	3	1	28	7	23	2
오피스텔	0	0	7	0	7	0
아파트	0	1	17	3	13	2
기타	3	0	4	4	3	0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32개 사업 중 31개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하지만 시행 후에는 24개 사업(75%)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어 탄력근로제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7〉 건축사업 유형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미적용	2주	4주	미적용	2주	4주
건축사업	31	1	0	8(-23)	24(+23)	0
오피스텔	7	0	0	1(-6)	6(+6)	0
아파트	17	1	0	5(-12)	13(+12)	0
기타	7	0	0	2(-5)	5(+5)	0

- 주 52시간 시행 전 현장 운영 실태(시종업과 월 휴무) 조사 결과, 7to6(월 0회 휴업), 7to6(월 2회 휴업), 7to6(월 4회 휴업)가 각각 11개, 10개, 7개 사업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함(표 23) 참조.
- 주 52시간 시행 후에는 7to6(월 4회 휴업), 7to6(월 2회 휴업), 7to6(월 0회 휴업)가 각각 9개, 8개, 6개 사업으로 조사되어 전체의 7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된 32개 건축사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사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14개로 전체의 43.8%를 차지함.

-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14개 건축사업은 오피스텔 3개, 아파트 7개, 기타 4개로 이들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각각 31.4%, 44.0%, 31.3%임.
- 건축사업의 주 52시간 시행 후 공기 부족 사업과 적정 사업의 평균 공사 규모는 유사하나, 오피스텔과 기타 사업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큰 곳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큰 경향이 있음.

〈표 18〉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건축사업의 영향 유무 및 주요 특성

구분	개소		공사 규모(억원)		공사 기간(개월)		공정률(%)		잔여 공사 기간(개월)	
	적정	부족	적정	부족	적정	부족	적정	부족	적정	부족
건축사업	18	14	4,085.1	3,593.9	36.8	34.6	34.4	37.6	24.9	21.9
오피스텔	4	3	1,381.3	4,136.7	42.5	41.7	12.3	31.4	37.1	28.9
아파트	11	7	6,026.9	4,563.0	36.2	33.9	39.2	44.0	22.2	19.0
기타	3	4	570.0	1,491.0	31.7	30.5	51.9	31.3	14.9	21.9

■ 발주자 유형별로는 건축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 28개 중 12개 사업이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4개 공기 부족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건축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에서 민간 발주자가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의한 공기 연장을 포함하는 계약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오피스텔과 아파트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자가 민간의 조합원이나 시행사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계약 변경은 이들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임.

〈표 19〉 공기 부족 건축사업 유형별 발주자 유형

(단위 : 개소)

구분	공공사업		공공/민간사업		민간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건축사업	2	1	0	1	16	12
오피스텔	0	0	0	0	4	3
아파트	0	0	0	1	11	6
기타	2	1	0	0	1	3

〈표 20〉 공기 부족 건축사업 유형별 공기 연장 가능성

(단위 : 개소)

구분	높음		낮음		미정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건축사업	4	3	13	10	1	1
오피스텔	0	0	4	3	0	0
아파트	2	1	8	5	1	1
기타	2	2	1	2	0	0



■ 탄력근로제 시행 여부 분석 결과, 31개 사업(96.9%)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시행 후에는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 14개 모두가 탄력근로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조사된 32개 건축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24개 사업(75.0%) 현장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노사 합의를 통해 4주 혹은 3개월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건축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탄력근로제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실태조사 응답 현장 중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나 노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확대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현장도 있음.

〈표 2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건축사업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미적용		2주		4주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건축사업	17	14	1	0	0	0
오피스텔	4	3	0	0	0	0
아파트	10	7	1	0	0	0
기타	3	4	0	0	0	0

〈표 2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건축사업 탄력근로제 적용 여부

(단위 : 개소)

구분	미적용		2주		4주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건축사업	8(-9)	0(-14)	10(+9)	14(+14)	0(-)	0(-)
오피스텔	1(-3)	0(-3)	3(+3)	3(+3)	0(-)	0(-)
아파트	5(-5)	0(-7)	6(+5)	7(+7)	0(-)	0(-)
기타	2(-1)	0(-4)	1(+1)	4(+4)	0(-)	0(-)

■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건축현장 운영(시종업과 월 휴업 일수) 변경 실태를 살펴보면, 동일 운영사업이 20개이고 단축 운영사업이 11개로 분석됨(〈표 23〉 참조).

〈표 2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건축사업 현장 운영 실태 비교

(단위 : 시간, 개소)

구분	주당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공기 적정 사업	공기 부족 사업	계
7to5(월 0회 휴업)	56	0	1	1	0(-)	4(+3)	4(+3)
7to5(월 2회 휴업)	52	0	0	0	1(+1)	1(+1)	2(+2)
7to5(월 4회 휴업)	48	1	0	1	2(+1)	0(-)	2(+1)
7to6(월 0회 휴업)	63	3	8	11	2(-1)	4(-4)	6(-5)
7to6(월 2회 휴업)	58.5	7	3	10	6(-1)	2(-1)	8(-2)
7to6(월 4회 휴업)	54	5	2	7	6(+1)	3(+1)	9(+2)
7to6(월 6회 휴업)	49.5	1	0	1	1(-)	0(-)	1(-)
기타		1	0	1	0(-1)	0(-)	0(-1)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		57.0	60.3	58.4	55.5	57.6	56.4

주 : 녹색으로 표시된 현장은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그룹임.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건설현장 운영 실태 분석 결과, 32개 현장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58.4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7.0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60.3시간으로 조사됨.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된 현장은 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28개 현장(87.5%)이 7to6(월 0, 2, 4회 휴업)로 운영되었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56.4시간(-2.0시간), 공기 적정 사업은 55.5시간(-1.5시간), 공기 부족 사업은 57.6시간(-2.7시간)으로 단축됨. 7to6(월 0, 2, 4회 휴업) 운영 현장이 23개소(71.9%)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현장은 5개소로 다소 증가하였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건설현장 주당 운영 시간이 단축된 사업(32개 사업 중 11개 사업) 중에서 공기가 부족해지는 현장이 발생함. 14개 공기 부족 건축사업 중 7개 사업은 현장 가동 시간을 동일하게, 6개 사업은 단축하여, 1개 사업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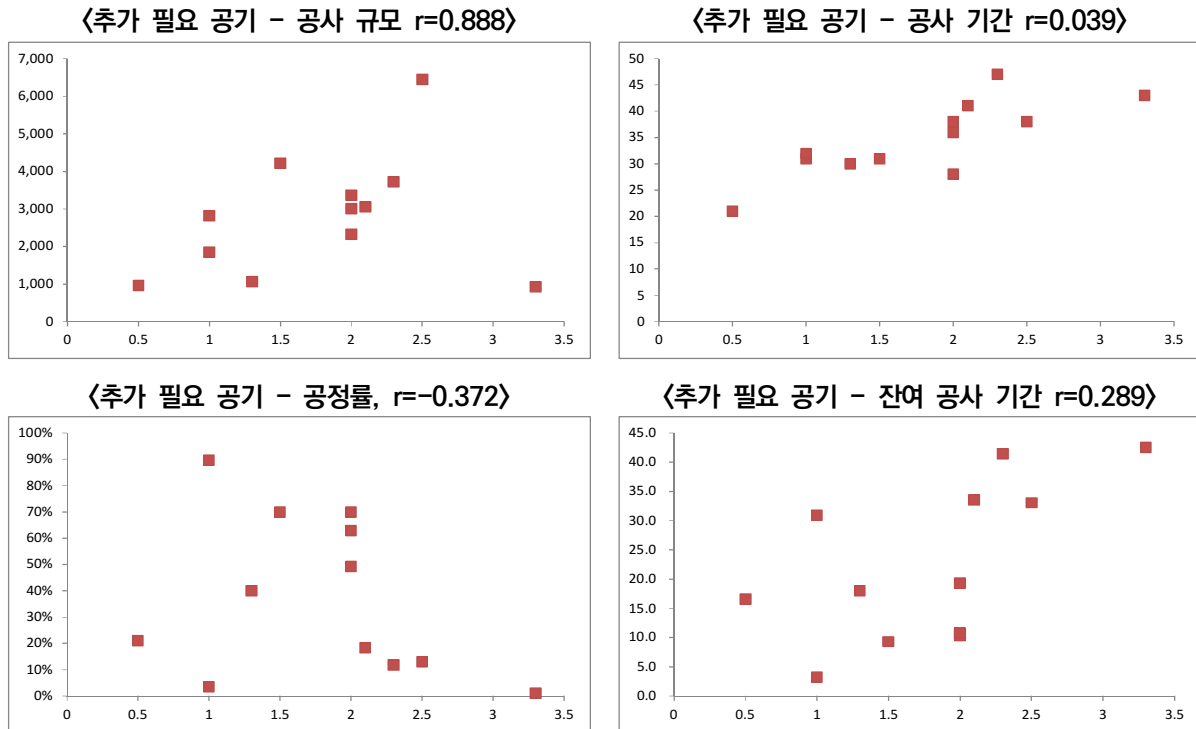
■ 공기 부족 건축사업 14개 가운데 1개 사업<sup>10)</sup>을 제외한 13개 사업의 평균 추가 필요 공기는 약 2.3개월로 조사됨.

- 13개 공기 부족 사업 중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의 최댓값은 8.6개월, 최솟값은 0.5개월로 조사되었음.
- 건축사업 가운데 공기 부족 사업은 통계적 유의미성은 부족하지만, 추가 필요 공기는 계약 당시에 결정된 총 공사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10) 1개 사업의 경우, “추가 필요 공기를 추정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6〉 공기 부족 건축사업의 추가 필요 공기와 사업 특성 간 관계 분석 결과

(단위 : 개월, 억원)



■ 건축사업은 32개 사업 중 14개, 즉 43.8% 정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조사된 건축사업 32개소 중 단지 2개 사업(6.2%)만이 주 52시간 이하로 현장이 운영되었음.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장 운영에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에도 기 계약된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업이 20개소로 분석되어, 건축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면서 계약된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함에 있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건축사업은 대다수가 민간사업이며, 민간 발주자는 공공 발주자와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계약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추후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사업 14개 중 10개 사업은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대다수의 건축현장은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현장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시행 후에는 24개 사업(75.0%)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하여 공기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시

행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탄력근로제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나 다른 조치가 필요함.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평균 공사 기간은 약 2.3개월로 분석되었으며, 오피스텔사업은 공사 기간에 비해 공사 규모가 큰 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영향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소결

■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사업의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과 발주자 유형에 따라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공기 부족 가능성의 증가로 귀결됨.

- 조사된 109개 건설사업 가운데 48개 사업(44.0%), 즉 토목사업 77개 중 34개 사업(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 사업(43.8%)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이 예상됨. 특히, 지하철사업(11개 중 9개)과 철도사업(14개 중 11개)은 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분석됨.
-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분석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연장 가능 여부가 사업의 발주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은 향후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 변경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공기 부족이 예상되나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사업은 건설사업 48개 중 22개(45.8%),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임. 아파트사업의 경우 7개 공기 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분석됨.
- 오피스텔, 아파트 등과 같은 민간 발주자의 건축사업은 현실적으로 공기 연장을 위한 계약 변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공사 기간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한 근로시간 단축이 민간 발주자나 계약자가 예측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이 아니기 때문임.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주당 건설현장 운영 시간이 평균 약 2.7시간 단축되었음. 건설현장의 운영 시간 단축은 시공 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관리 측면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커짐을 의미함.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의 평균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단축되었음. 구체적으로, 61개 공기 적정 사업은 주당 57.9시간에서 55.8시간으로, 48개 공기 부족 사업은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이 62.6시간에서 59.2시간으로 단축되어 공기 부족 사업에서 운영 시간 단축 폭이 큼을 알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중요함. 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로 대부분의 공기 부족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상 노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3개월 적용이 힘든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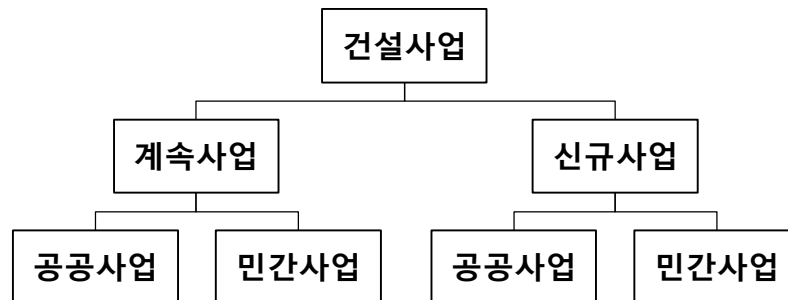
#### ■ 추가 필요 공기 분석 결과, 토목사업이 건축사업에 비하여 추가 필요 공사 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됨.

- 조사된 전체 건설사업의 평균 추가 필요 공기는 4.9개월로 토목사업이 6.2개월, 건축사업은 2.3개월로 분석됨. 이는 토목사업의 사업 기간이 건축사업에 비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V 정책 제언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하여 적용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속사업 :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계약된 건설사업을 의미하며, 대응 방안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구분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신규사업 : 2018년 7월 1일 이후에 계약된 건설사업을 의미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이 필요함.

〈그림 7〉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방안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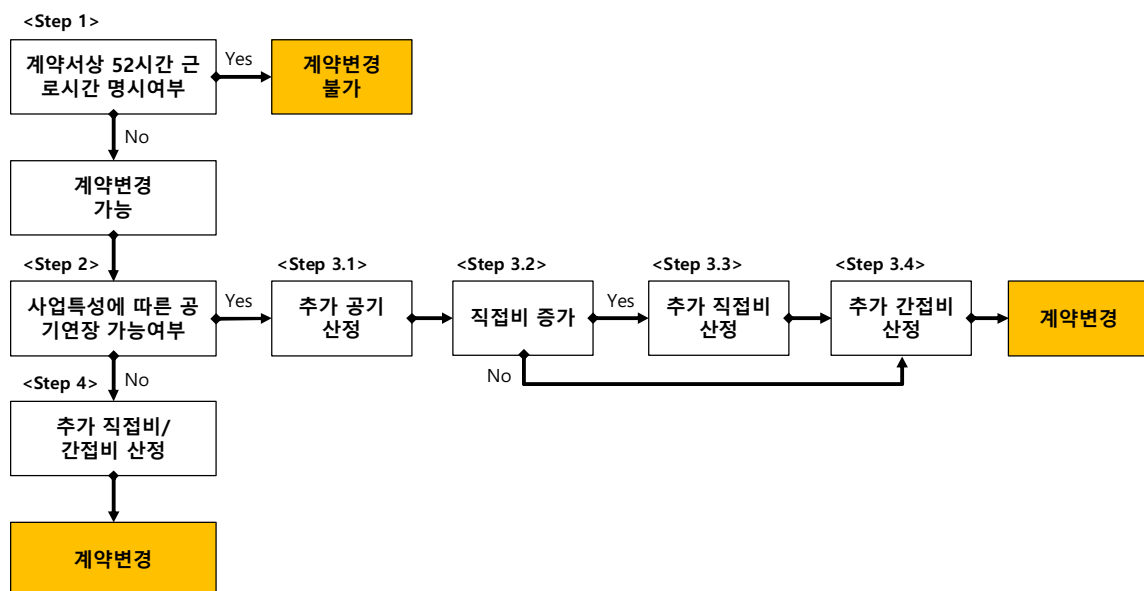


### 1. 기 계약된 공공사업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 기간의 산정 기준이나 돌관 작업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기본 원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논쟁의 소지가 큼. 이에 정부는 소모적인 법정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지침은 정부, 발주자, 시공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Step 1〉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함.
- 〈Step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 변경은 크게 공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되며, 이는 발주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특히, 준공 시한의 중요성이 높은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발주자와의 공기 연장 협의가 필요함.
- 〈Step 3〉 계약 변경이 공기 연장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공정표와 변경 공정표를 비교·분석하여 추가 공기를 산정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직접비와 간접비를 산정해야 함. 이를 기반으로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변경을 이행하여야 함.
- 〈Step 4〉 사업의 특성상 공기 연장을 통한 계약 변경이 어려울 경우, 생산 자원 추가 투입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함. 이에 따른 추가 직접비와 간접비를 산정하고 발주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변경을 이행하여야 함.

〈그림 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 변경 가이드라인(안)



■ 진행 중인 공공 건설사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변경에 대한 세부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함.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 이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지침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 일부 사업은 현장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품질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는 결국 공공 건설사업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조속히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 2. 기 계약된 민간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된 민간 계속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주자, 시공자,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된 32개 민간 건설사업 중 13개 사업(40.6%)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조사됨. 13개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민간사업 중 발주자와 합의를 통하여 공기 연장이 가능한 사업은 3개에 불과함.
- 이는 민간 발주자가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 계약된 민간사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민간 시공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기 계약된 민간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가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 보전 방안은 전무한 상황임.

- 공공 건설사업의 경우 제도 변경이라는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근거하여 계약 변경을 통한 원칙적인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만, 민간 건설사업은 그러한 해결 방안이 전무한 상황임.
- 민간 건설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공사,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는 입주 시기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따라서, ‘선 판매 · 후 생산’ 구조를 가진 건설사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 계약된 민간 건설공사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유예하여 발주자, 시공자,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3.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신규 사업의 공기 및 공사비 산정 필요

■ 신규 건설사업은 공공과 민간 사업을 막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공기 및 공사비 산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장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조사된 109개 건설 사업 중 12개소만(10.1%)만이 주 52시간 이하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었음. 이는 약 90% 현장의 공기관리가 주 52시간 이상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계약되는 건설사업은 현장을 주 52시간(예를 들어 시종업 7to5, 월 2회 휴업)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함.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임.

■ 현 시점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공사 기간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추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 변경을 허용케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영향으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감소 외에도 작업의 연속성 저하나 새로운 현장관리에 대한 적응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영향들을 모두 예측하여 계약시에 반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쉽지 않음. 따라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 예비 장치 마련이 필요함.

### 4.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

■ 기상 요인으로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건설현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조사된 109개 사업 중 77개 사업(시행 전에는 82개 사업이 탄력근로제 미적용)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하였음.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함.
- 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 2주, 노사 합의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사 합의 3개월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한 시점에서 계획한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가 변경될 경우 계획 변경 후 재합의가 필요함.
-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단위의 근로자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근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탄력근로제 확대는 계속사업에 있어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난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여 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최수영(부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손태홍(연구위원·thsohn@cerik.re.kr)